

민주연구원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학교 밖 교사의 시민적 권리는 폭넓게 보장하되, 교실 안 기준과 절차는 명확히 해야”
권리 확대 논쟁을 넘어 학생 보호·공교육 신뢰·현장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단계적 제도 설계 제안**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는 교사의 시민적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학생 보호, 공교육 신뢰, 학교 현장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책 과제”라며, “이번 보고서가 다양한 해외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의 핵심 쟁점은 ‘교사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단순한 허용 여부가 아니라, 학생 보호와 공교육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어떤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에 있다고 진단했다.
-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전면 허용 또는 전면 금지의 이분법에만 머물러서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학교 밖 교사의 시민적 권리 보장과 교실 안 교육활동 기준의 명확화를 함께 추진하는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 특히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 및 출마 등은 성격과 위험 요인이 서로 다른 만큼 권리 단위별로 허용 범위와 제한 기준을 달리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따라서 보고서는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리 확대의 당위만 강조하기보다, 교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심 위험을 기준과 절차로 통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정치적 중립’을 정치 회피가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활동 기준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교실에서 정치·사회 쟁점을 다루는 것 자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결론에 대한 주입·강요, 학생 동원, 평가·기록상 불이익, 학교 공식 채널과 직무자원의 정치적 사용을 명확히 금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 동시에 쟁점 수업, 균형 있는 자료 제시, 토론·숙의 운영, 팩트체크, 헌법과 기본권 교육, 정책 비교 분석, 근거 중심 평가는 허용되는 교육활동으로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정치적 중립 요구가 정치·시민교육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학생의 학습권과 사상의 자유, 공교육 신뢰를 함께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보고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 방향으로 ①권리 허용 및 제한 범위의 경계 설정 ②교실 안 교육활동 기준 구체화 ③민원·조치 절차와 판정 기준의 체계화 ④선거기간 운영기준과 학교 내 안전장치 마련 ⑤법령 체계 정비와 단계적 도입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 우선 단기 추진 과제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가이드 라인, 사례집, 연수체계, 민원 처리 절차 등 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중기 제도화 과제는 교실 안 교육활동 기준과 민원·조사·조치 절차를 법령과 하위규범으로 제도화해, 교사와 학생·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장기 발전 과제는 시민교육, 토론수업, 평가 공정성, 비차별 원칙을 교원 전문성 개발 체계와 연계하고, 제도 시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해 권리 보장과 학생 보호가 함께 작동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은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권리 확대의 찬반 대립에서 벗어나, 이제는 학교 밖 권리 보장과 교실 안 교육활동 기준의 명확화를 함께 추진하는 실질적 제도 설계 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